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산업과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서*

민 병 원 |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한류의 열기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이러한 한류의 추세 속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가 동아시아의 문화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화산업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성과 상품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 본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문화산업의 동반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정책의 논리 역시 중앙집중적 메커니즘을 동원하여 하향식 통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의 논리는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과 배치된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부분적으로 대중사회 시대의 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다자간 문화 패러다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논리가 지배하는 문화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본 논문에서는 공동의 정체성 확립과 의미권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서 제시한 '트라디툼'의 논리는 문화적 정체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통적 요소를 대변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권'의 구축이 미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질서의 문화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권의 구축은 한 나라의 지배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자국 중심주의와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끔 해주는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특히 공동의 문화기획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론장'을 마련하는 일 역시 앞으로 동아시아 미래 질서의 방향을 가늠 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문화산업 문화정책 트라디툼 정체성 의미권 문화공론장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6-321-B00016).

I. 머리말

탈냉전기에 들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빠른 속도로 커져 왔다. 국제관계의 차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와 안보, 경제에 치우쳐 있던 국가적 관심사가 문화적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역적 차원에서도 국경을 넘어 주변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변수가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게 되면서 문화는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핵심 키워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지식질서 속에서도 문화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는 문화변수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차원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어 문화교류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기술 발전에 따른 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제약을 넘어서는 공통의 문화기반 구축에 대한 기대를 북돋우고 있다(Lim 2002; Keane 2006, 847-84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질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문화는 개념 규정이 매우 어렵기로 유명하다. 그만큼 다의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통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개념을 제외한 채 오늘날 동아시아의 미래 질서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들어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문화담론이 외관상으로는 초국가적 문화교류라는 바람직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중심적 자본주의의 논리에 몰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군사, 경제 등 기존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문화영역을 이해하려는 성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라는 구

호 아래 문화의 고유한 모습들을 파괴해가는 오늘날의 패러다임으로는 궁극적으로 문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2장에서는 문화변수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이것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질서 속에서 문화변수의 위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짚어보고, 그것이 세계질서와 연관되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류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를 비판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술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류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패러다임으로 발전해나갔는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논리와 중앙집중형 통제의 논리가 이러한 편향된 개념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 질서 속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정체성과 의미권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 패러다임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기존의 국가중심적, 상업주의적 관행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 되고 있다.

II.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

1. 문화변수와 문화국가

문화는 경제와 더불어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간주되어왔다. 1948년 UN 인권선언(UDHR) 27조 1항에서는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항에서는 “모든 개인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인간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 보는데 있어서도 문화는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인간과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기에 들어와 문화변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왔다. 냉전기의 지역 질서와 국제관계가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대결,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탈냉전기의 모습은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포스트모던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국제관계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는 문화공동체의 담론 역시 이와 같은 탈냉전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Nye, 2004; 김광익, 2005; 김국신 외, 2006). 특히 유럽연합의 통합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국가 간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협력과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러한 문화변수의 역할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야흐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Jameson, 1998).¹

백범 김구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국가가 ‘아름다운 나라’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게 할 정도의 경제력과 남의 침략을 막을 정도의 힘만 가지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범이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바로 ‘문화력’이었는데, 이것은 문화가 우리 자신과 더불어 남까지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문화라고 보았다.

1.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개념은 20세기 초반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과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촉발된 ‘언어학의 전환(linguistic turn)’이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데 바야흐로 문화변수의 역할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김구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의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미래의 모습은 바로 문화적 역량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김구, 2002: 398-400).² 흥미롭게도 반세기 전 백범이 설파했던 문화국가의 이념은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에도 여전히 타당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변수'라 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사가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는 역사를 움직이는 세 가지 힘으로 국가, 종교, 문화를 꼽은 바 있다. 이 중에서 국가와 종교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 반면, 문화는 이러한 권위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르네상스기의 문화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Burckhardt, 2006). 동아시아의 문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뿌리를 제공해주는 원천이었으며, 중화문명권 내에서 이루어져온 문화교류는 동아시아라는 독특한 지역관념을 만들어왔다(김광역, 2005: 333).³ 아쉬운 점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도 20세기에 들어와 근대화와 냉전의 유산이 너무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까닭에 오늘날의 문화적 역할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해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문화 관념이 그 중요성에 걸맞게 동아시아에서 적절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념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많은 복수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문화'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우선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유형화된

-
2. 김구의 문화국가론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에 유행하던 사회동포주의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는 제국주의라는 힘의 논리에도 찬동하지 않았고 동시에 사회주의적 투쟁양식도 배격하였다. 문화입국의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3. 일부 역사학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교류가 오랜 시기에 걸쳐 유지되어왔지만 지역적 통합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경우 '동아시아'의 관념은 하나의 착각 또는 허상에 불과하다. 19세기 말부터 서양세력과의 대면을 통해 동아시아의 상대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이때에는 이미 문화적 연대감을 생성할 수 있는 여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고병익, 1996: 95-96).

생활양식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학습된 행위, 생활양식, 사회적 유산, 가치관, 태도, 관습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생물학적, 자연적 본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식적인 행위와 결과를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편 '좁은 의미의 문화'는 '내부 감정 및 관념의 미적 표현'을 뜻한다. 종교적 의식을 포함하여 문학, 미술, 음악, 공연예술 등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감정의 표현양식을 문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는 사실상 예술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된다(김정수, 2006: 36-37).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도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인 문화 개념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처럼 문화변수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세계질서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그동안 국제정치이론의 여러 영역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자원에 대한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이나 '문명의 충돌'에 관한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논의는 이제 이 분야에서 고전이 되고 있다(Nye, 2004; Huntington, 1996). 서구 편향성에 물들어 있기는 하지만 '제도'의 요소를 강조하는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 테마나 노쓰(Douglass North)의 경제제도론 역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어 뒤지지 않는다(Fukuyama, 1992; North, 1981). 하지만 국제질서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균형 잡힌 이론적 프레임워크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콕스(Robert Cox)의 역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은 물질적 권력과 이념(ideas)의 복합적인 영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미래 질서를 논하는데 유용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콕스의 논의 속에서 드러나는 이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상호주관적 의미(intersubjective meaning)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질서의 집단이미지(collective images)이다. 상호주관성은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집단이미지는 집단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콕스는 물질적 권력과 더불어 이러한 이념, 즉 문화적 요소들이 특정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

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측면인데, 이처럼 물질적 권력, 이념, 제도화의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이다(Cox, 1984: 272).⁴ 콕스의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물질적 권력만으로 세계질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고, 이념으로 표현되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화변수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강조 역시 잘못된 편견을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근 한류의 확산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는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왔지만, 그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문화’라는 중요한 변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면서 광범위한 탐구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질서의 한 축을 형성하는 문화변수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경제논리와 통제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왔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비록 경제와 정치라는 기존의 틀 속에서 문화변수가 제약을 받아왔지만,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문화변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질서의 올바른 이해는 이처럼 문화라는 새로운 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문화변수의 순기능과 문화국가의 꿈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세계화와 정보화: 동아시아 문화의 부상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문화변수의 확산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

4. 콕스의 신그람시주의적(Neo-Gramscian) 주장은 부분적으로 좌파 이데올로기 프레임워크에 경도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 권력, 이념, 제도화의 프레임워크 역시 헤게모니 질서에서 권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좌파의 기본적인 명제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Cox, 1984: 27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는 국제관계이론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사실상 서구에서 먼저 시작된 문화담론은 오랜 사상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에 대한 관심들은 헤겔(Georg Hegel)의 정신현상학과 베버(Max Weber)의 사회학에서 시작하여 헌팅턴의 문화정치학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적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역사발전을 이해하는데 있어 종교와 ‘서양정신(Occidental Geist)’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역사문화주의(historical culturalism)’는 그동안 상위정치(high politics)에 밀려 상대적으로 등한시된 문화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서양의 모델이 역사발전의 유일한 경로라는 편향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환원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⁵ 이러한 지적 전통 속에서 동아시아와 같은 외부의 문화는 서양정신이라는 배타적 기준에 따라 재단되고 평가되어왔다. 예를 들어 서양이 지닌 정신적(spiritual), 윤리적(ethical), 문명적(civilizational) 우월성은 다른 지역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역사발전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되곤 했다(Açikel, 2006: 80-81). 서구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동양문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온 이러한 일방주의는 문화적 정통성과 헤게모니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양 중심의 시각에 경도되어 서구지향성을 강조해왔던 문화담론은 오늘날 많은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화의 이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표준 장악 의도는 반(反)세계화론자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오늘날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세계화가 곧 미국화이며,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협상과 노력들은 곧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굴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aid, 1993; 강내희, 2006: 40-47). 이러한 주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한 면을 지니고 있으나 국제질서라는 거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가 곧 사전에 의도했던 합리적 결정과 정책의 산물이라

5. 과거의 수직적 문명관을 벗어나 ‘수평적’ 문화개념을 강조했던 헌팅턴의 상대주의의 논 의조차도 문화가 하나의 ‘주어진(given)’ 또는 ‘고정된(fixed)’ 것이라는 전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외관상으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외치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여전히 서구문화를 중심에 놓으려는 배타적 성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Tempelman, 1999).

는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말하자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설정한 연후에야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화가 곧 미국이 원래 의도했던 지배구조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할리우드(Hollywood)라는 메타포를 통해 미국의 강력한 문화적, 기술적 영향력이 잘 알려져 왔다(김상배, 2006: 9-12).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 구조가 특정한 국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져왔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이 결과적으로 힘의 승자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세계문화질서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날 세계가 특정한 나라의 의도대로 움직일 정도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조차도 결코 세계의 문화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문화산업과 같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야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문화의 모든 모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계화와 미국의 ‘문화패권(cultural hegemony)’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개념상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김상배, 2007: 203). 예를 들어 9.11 사태나 이슬람 근본주의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저항에 의해 미국이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흔하다(Simes, 200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문화산업의 경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세계의 문화질서를 미국 주도의 구도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합리성의 전제 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는 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바탕에는 바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Vernon, 1979; Jervis, 1997).

문화질서의 모습이 강대국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제3의 행위자에 의해 다시 변형된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화의 물결이 항상 중심부에서 주변부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왔다. 카리브해의 설탕과 중국의 차가 영국인의 오후 생활습관을 변화시켰듯이, 문화는 주변부에서 중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역류현상을 일컬어 ‘토크백(talk back)’이라고

부른다(Breidenbach and Zukrigel, 2003: 133), 동아시아 문화도 이러한 점에서 서구를 포함한 세계 전역에 상당한 정도의 토크백을 행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담론에 일방적으로 압도될 만큼 동아시아의 문화콘텐츠가 부실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비단 동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중동지역이나 남미, 아프리카 등 오늘날 자발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탈냉전기에 가시화되고 있고, 해묵은 제국주의 논쟁이 문화영역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물든 미국 중심의 문화제국주의를 거부하는 대항담론들이 21세기에 들어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동지역을 휩쓸고 있는 종교적 원리주의나 남미의 좌익사상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과거에 ‘주변부’로 치부되던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토크백의 움직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 역시 세계의 문화질서가 한 나라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그만큼 ‘문화패권’이라는 표현은 국가의 의도라는 관점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IT 기술의 확산에 힘입은 정보화의 추세 역시 문화변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일조해 왔다. 1970년대 이래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현상은 생산체계의 규모와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과 조직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각 분야에서 편의성이 증대되고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전략적 마인드가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경제와 문화적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서구중심적 모형을 대거 흔들어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Castells, 1996: 151-166). 그 결과 새롭게 등장한 국제사회의 모습은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라고 불리는 복잡한 연결망으로 나타났다(Harcourt, 2003; Castells, 2004: 14-15).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IT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정보화, 네트워크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던 자신들의 정체성 관념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네트워크 사회성(network sociality)’이다(Wittel, 2001: 62-65). 이로 인해 현대 세계에서 문화변수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조명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은 지금까지 국민국가의 경계선에 의해 획정된 공간 개념과 물리적 거리로 인한 지연효과라는 시간개념을 바꾸어놓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공간의 지역성이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변형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더욱 복잡해져가는 상호연계성이 장소와 문화 변수 사이의 결속을 점차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간적으로 한정된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간주하던 문화변수가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더욱 넓게 전파 및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Giddens, 1991; Harvey, 1994). 물론 이러한 추세가 곧 하나의 ‘세계문화(world culture)’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계화로 인해 개별 특수문화들이 널리 확산되고 전파되는 계기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효과가 곧 통합된 보편 문화의 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는 단지 기존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있을 따름이다(Tomlinson, 2004: 50-5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토크백’을 위한 제반 여건들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⁶ 과거의 경제발전기를 통해 일본이나 ‘4마리의 용’에 대한 바깥의 관심은 유교문화나 권위주의체제 등 이 지역의 고유한 속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서구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갈망하는 세계의 변방지역들은 동아시아를 벤치마크하기 시작했다(Deyo, 1987; Amsden, 1989; Wade, 1990). 비록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지역의 경험은 후발 국가들이 눈여겨볼만한 임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물론 동아시아 발전의 경로를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답습하기는 곤란하다. 아시아의 고유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6. 이 논문에서 ‘동아시아’는 공간적, 지리적 관점에서 대체로 동북아시아를 가리키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다. 동아시아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쉽게도 명확한 경계선 설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하나로 묶기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광익, 2005: 333-335).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오늘날 한류와 같은 문화의 확산효과를 고려할 때 과거의 기준에만 의존하여 동아시아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배경 하에 이루어진 성과였기 때문이다(Cumings, 1984; Holzer, 2000).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문화적 요소가 끼친 영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성공은 곧 힘과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졌는데, 일본과 중국이 글로벌 수준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과 더불어 20세기 후반에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들은 거대한 경제규모와 첨단 IT 기술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해왔다(Giovannetti 외, 2003,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역(region)’으로서 동아시아의 제도적 기반은 대단히 취약했다(Pyle, 2003: 17-18). 유럽연합의 가시적인 통합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 공동체의 논의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 지역은 역내 통합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가장 뒤쳐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Kurlantzick, 2007; Pempel, 2005). 사실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와 공동체 건설의 움직임은 유럽의 경험을 이곳에서 그대로 복제하기 위한 대항담론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Beeson, 2005: 978-981). 그럼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와 안보협력을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의 성장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의 구축에 있어 무엇보다도 문화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역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역사와 경험, 언어, 상징, 정체성 등 문화의 여러 측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일본의 문화가 동남아시아에서 놀랄만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후 2000년대에는 한류의 열풍이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의 성장과 문화변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콕스가 제시한 이중의 조건을 만족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7. 홀쩌(Boris Holzer)는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이 모두 작동하는 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부과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 요인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유행하던 유교문화와 베버(Weber)식의 프로테스탄티즘을 동일시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체제의 적응능력을 제고시키는 문화적 특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Holzer, 2000: 470-471).

물질적 권력과 아이디어라는 두 가지 요소는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만 추가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질서 구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는 그만큼 경제적 성공과 정보화,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확산이라는 이중의 구도 속에서 그 다음 단계의 질서를 지향하는 수준에 도달해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에서 지난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협력과 통합의 노력들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문화공동체’를 먼저 구축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평화적 안정과 경제협력을 위한 도구적 시각을 넘어서지 못해왔다. 즉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통합을 이루고 또한 안정적인 지역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전영평·박경하, 2004: 36-37). 동아시아의 다양성을 하나의 체계 속으로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적인 모습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러한 헛된 입장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김명섭·이동윤, 2005).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질서 구축에서 빚어지고 있는 한계와 딜레마의 가장 큰 원인을 문화적 측면에서 찾고자 하며,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중앙집중적 통제마인드에 물든 문화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를 비판하고자 한다.

III.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1. 문화의 일상성과 대중문화: 동아시아의 경우

문화는 엘리트적인가, 아니면 대중적인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문화는 단연코 후자의 요소에 더욱 기울어지고 있다. 문화가 대중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고 함은 곧 문화 속에 내재된 일상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찍이 윌리엄즈(Raymond Williams)가 ‘문화는 일상적이다’는 표현을 통해 강조했

듯이, 일상적 문화는 극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특권층의 배타적 문화에 대항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천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예술이나 문학 등 좁은 의미의 문화 관념을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인 것이다 (Tomlinson, 2004: 36). 이와 같이 문화가 일상성을 띠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훨씬 더 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미권’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소수 엘리트의 여유와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처절한 삶을 규정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이 소개하고 있는 ‘고양이 대학살’의 사례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구술체 이야기로서 고급문화에 대한 하위계층들의 반발과 저항의 분위기를 잘 대변하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1730년대 파리의 한 인쇄소 견습공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처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공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주인에게도 학대받는 계층으로서, 여주인이 기르는 고양이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둑고양이들을 소탕하라는 여주인의 명령을 받은 견습공들은 여주인이 애지중지하는 애완 고양이조차 때려잡고 만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비탄에 잠긴 여주인을 조롱하고 능멸하고자 하였다.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은 이처럼 억압 받는 자들의 정서적 분출구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인구에 회자되어왔다(Darnton, 1984: 112-115).⁸

18세기 프랑스에서 고양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대상이었다. 당시에는 동물학대가 대중적인 오락이었는데, 주된 대상은 고양이였다. 사육제와 사순절이라는 환락과 금욕문화 속에서 고양이는 참회의 제례를 위한 제물

8. 단턴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보다 농민들의 구술이나 민담에서 드러나는 삶의 현장을 파헤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사료분석보다는 민속학적, 인류학적 성향을 띤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글로써 정리된 사료가 아니더라도 가치를 지닌 모든 대상물의 수집을 통해 낯선 의미체계를 해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개개의 자료들이 비록 친숙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결국 단턴의 접근방법은 ‘위로부터의 역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구현함으로써 문화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화적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구분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로 여겨지곤 했는데, 군중들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 고양이를 불사르기도 했다. 고양이가 마법을 암시하거나 주술적인 힘을 지닌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이의 힘은 가장 은밀한 부분, 즉 성(性)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이로 인하여 여성과 고양이는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은 당시의 ‘텍스트’를 형성한다(Darnton, 1984: 132-145). 사람들이 왜 고양이를 학대하고 학살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텍스트를 해석해야만 한다.⁹

동아시아의 문화도 여타 지역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로서 존재해왔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반 민중들의 삶은 문화적 여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고 정보화를 통해 지리적 거리가 압축되면서 일반 민중들의 생활에서도 ‘토크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의 동아시아 문화교류가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대중들이 참여하고 대중들을 겨냥한 새로운 문화질서가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고양이 대학살’ 현상이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 발전으로 인해 문화콘텐츠와 문화행위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물질적 권력에 버금가는 대안의 문화적 권력자원이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대중 차원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 문화질서는 그동안 국가 중심의 상위정치질서로부터 밀려나 있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정치적 협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발전은 시대적 간극을 뛰어넘어 문화의 진정성에 관한 의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문화에서 ‘진정성’이라 함은 원래부터 존재

9. 여주인이 가장 아끼는 고양이를 살해함으로써 하층민들은 부르주아 여주인을 능멸하고 반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고양이라는 마녀의 상징을 처단함으로써 자신들을 괴롭히는 여주인이 마녀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18세기의 이러한 장난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는 살짝 가린 채 부르주아를 조롱하려 했던 인쇄공들의 저항정신이 돋보이는 사례였다(Darnton, 1984: 146-148).

하면서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들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의 전형’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고유한 진정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많다(Breidenbach and Zukrigel, 2003: 188). 그럼에도 우리가 문화의 진정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에 시작된 문화적 진정성의 탐구는 대부분 문화의 차별화를 위한 편 가르기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의 개념이 오늘날의 생활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누구의 진정성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계층에 대해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계층에게는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18세기 이전이라면 고양이 대학살이 문화적 진정성을 지니지 못한 사건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는 문화적 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중문화의 등장은 그만큼 ‘무엇이 진정한 문화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물론 문화의 일상성이 곧 문화의 진정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대중문화의 등장이 곧 엘리트문화의 가식적인 진정성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문화의 진정성에 관한 강조점이 과거의 전통적, 엘리트 중심적 문화 패러다임으로부터 현대적, 대중적 패러다임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후자의 논리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대중사회가 등장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 대중들의 기호를 담아내는 문화적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대중들에게 폭넓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문화의 결과물에만 초점이 두어졌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차별적이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던 문화는 대중사회의 면전에서 밀려난 채 애호가들의 소장품이나 소수의 전유물로 치부되고

10.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은 세계적인 테너들이 전 세계 축구장을 돌면서 클래식 명곡들을 열창했던 사례를 들어보자. 이들의 공연이 대성황을 이루었지만, 기존의 오페라 관객과 문예평론가들은 이에 대해 철저히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대중공연은 유럽의 고급문화를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였다(Breidenbach and Zukrigel, 2003: 188). 상류계층이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던 고급문화가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감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누려왔던 차별성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그로 인해 문화적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말았다. 동아시아에서의 상황도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20세기 후반에 불어 닦친 초국가적 대중문화의 돌풍은 ‘무엇이 진정한 문화인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은 바로 문화행위의 최전선을 주름잡고 있는 패러다임, 즉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라는 양대 줄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가 ‘대중문화(mass 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대중을 상정한다. 이러한 대중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을 포함하며 익명성과 고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나 집단적인 조직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중의 속성은 대중문화의 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중문화는 그것을 창출하는 예술가와 수용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가 희박해지며, 그 대신 이들을 연결하는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점은 민속문화나 엘리트문화, 그리고 포퓰러문화와 구별되는 대중문화만으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Dodson, 1998: 180-181). 그런 까닭에 대중문화는 오랫동안 경멸적인 어조로 사용되어져 왔고, 오합지졸로서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문화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곤 했다(Gans, 1974: 10).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글로벌 차원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대중문화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2. 문화산업과 문화정책: 신자유주의와 통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는 역내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축을 형성해왔다. 특히 IT 혁명으로 인한 미디어의 발전은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문화질서가 그 방향성에 있어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진단도 가능한데, 이는 자본주의적 경제논리와 중앙통제형 정치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는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문화

산업'으로 발전해왔다. 문화 콘텐츠를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추세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마치 문화행위를 재 단하는 최우선의 기준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은 매우 크다.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문화 콘텐츠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뒤로 밀쳐지고, 내용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성공한 문화상품은 무한 반복적으로 복제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가 지녀왔던 포괄적인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경제 논리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IT 기술의 발달은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의 비중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화의 추세는 글로벌 차원의 지식 사회를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부상시켜왔다. 20세기의 자원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 관련된 하드파워였다면, 21세기에는 정보, 지식, 그리고 문화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활동에서 문화적 요소가 차지 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글로벌 사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문화상품과 서비스시장이 새롭게 창출되고 또 확산되기 때문이다(구문모 외, 2000: 26-30). 하나의 문화상품은 한 가지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재창조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속성을 '윈도우효과(window effect)'라고 부르는데, 원래의 본질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분적이고 외형적인 변화만을 통해 가치가 증가하고 반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IT 기술의 발달은 바로 이러한 윈도우효과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미디어의 손쉬운 복제기능으로 인하여 문화콘텐츠가 다른 영역에서 재활용될 때 들어가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되기 때문이다(김재범, 2005).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문화상품은 다른 하드웨어와 달리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초기 생산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생산된 이후에는 재생산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¹¹

11. 윈도우효과는 '하나의 원천과 복수의 활용(one source multi use)'이라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상품이 여러 매체를 거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러 윈도우들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한편의 할리우드 영화는 미국 내 상영을 거쳐 해외배급으로, 비디오와 TV 방영으로, 나아가 다양한 상품캐릭터와 음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경제적 가치

하지만 이러한 부가가치의 극대화 성향으로 말미암아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점점 커져왔다. 문화의 창조와 유통, 소비의 제 단계에 걸쳐 가치가 재창출되는 ‘가치사슬’은 전통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거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성은 결국 정부가 문화산업에 개입하는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양건열 외, 2006: 9). 정부의 개입은 바로 ‘문화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으로서, 전형적으로 ‘큰 정부(big government)’의 관점에서 문화의 지평을 조절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발상은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의 근본적인 속성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정부의 규제와 지원정책이 특정한 문화 콘텐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판단이 항상 합리적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문화가 갖는 고유의 기능은 통제의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하향식(top-down) 통제논리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대중문화에 영합하고 문화산업의 논리에만 충실하게끔 국가의 자원을 배분한다면 문화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은 단지 오락적인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 반세기 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제기했던 문화산업 비판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기술 발전에 따른 문화의 동질화 현상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압도되었는가를 세밀하게 분석해 왔다. 자본주의는 규격화, 대량생산, 그리고 중앙집중적 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틀 속에서 문화는 단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도식화되고 획일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심미적 소재를 상실하게 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이러한 규격화의 필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상상력을 희석시키고 오로지 기계적인 복제와 보편적인 기준만을 반복한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문화산업은 결국 ‘아만적’ 문화로 전락하여 권력과 자본의 조종에

취약해지고 사람들의 정신적 무기력증을 초래한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이러한 문화의 왜곡현상을 ‘베토벤과 카지노의 결합’이라는 냉소적인 메타포로 묘사하기도 했다(Horkheimer and Adorno, 1995: 188-194).

결국 문화산업은 단지 유흥산업 또는 오락산업에 불과할 따름이며, 사물의 정곡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인간의 충동을 억압하는 공허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문화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분해되어 교환가치를 위한 모듈로 바뀌고, 이러한 모듈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합되고 포장되어 문화상품으로 팔려나간다. 말하자면 문화상품은 그것이 지닌 ‘교환가치’를 통해서만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대중사회에서는 진정한 문화가 아니라 오락을 원하며, 문화상품은 다른 소비재와 똑같이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오락산업은 소비재를 생산하듯 대중들의 생활 속에 충전되고 소멸되는 문화상품을 끝없이 생산한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대량복제는 겉보기에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문화를 파괴할 따름이다(Arendt, 2005: 276-280).

문화산업은 전통적인 문화자산을 새로운 틀 속에 규격화시킴으로써 그 소비자들이 ‘위로부터의 조종’에 순응하게끔 만들어버린다. 효용성이라는 미명하에 순수한 문화의 본질은 파괴된다. 대중을 위한 문화산업이지만, 그 속에서 대중은 단지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할 따름이다. 비판을 하지 못하는 대중들은 문화산업을 움직이는 세력들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제공해준다(Adorno, 1975: 12-13). 이렇게 보면 문화산업은 그것을 향유하는 개인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지닌다. 물론 표준화된 대량생산과 복제를 통해 대중화된 문화상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문화산업 속에 내재된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개인은 이러한 문화산업의 홍수 속에서 단지 보편성에 흡수된 형태로서만 존재한다. 개별성은 희생되며 평균적인 것이 영웅화된다.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대체되고, 진정한 문화애호가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속물들이 들끓는다. 험값의 대량판매가 교양을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다(Horkheimer and Adorno, 1995: 203-213).

아렌트(Hannah Arendt)도 문화산업에 의해 창출되는 대중문화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퍼부은 바 있다. 그녀가 보기에 대중문화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을 통합함으로써 개인을 위한 탈출구를 폐쇄하고 절망 속에 빠뜨린다. 탈출구가 봉쇄된 대중사회에서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문화는 현실 도피와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전락하며, 그 고유의 영구적 불멸성을 상실하게 된다. 말하자면 문화가 속물주의자들의 자기완성을 위한 도구로 남용되고 만다(Arendt, 2005: 266-273). 사실상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교류를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문화 프로젝트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보기에 이러한 노력은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의 어설픈 혼합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문화 프로젝트 속에서 개별 문화는 최소공배수로 간주된다. 비즈니스 프로젝트로서의 문화는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로 해체된 다음에 상업적 논리에 맞추어 레고처럼 재구성된다. 이러한 레고와 같은 조립과정을 통해 문화의 본질적 가치는 점차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보드리야르의 주장이다. 19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문화는 서로의 차이로 인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곤 했지만,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문화산업은 더 이상의 충돌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화의 차이를 소멸시켜가고 있다(Baudrillard and Sassatelli, 2002: 526-527).

지난 10~2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온 한류(韓流)현상도 프랑크푸르트학파나 아렌트가 비판했던 문화산업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한류는 문화 고유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문화 상품으로 인식되어왔다. 한국의 문화상품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출 증진효과를 거두는데 성공해왔지만, 지나친 상업주의라는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움으로써 앞으로도 한류의 바람이 계속 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장논리 우선주의는 문화의 순수성이나 호환성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장기적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이동연, 2006). 일본의 문화상품이 동남아시아를 휩쓸던 때에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일본의 문화는 혼종주의를 비판으로 하여 비약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결국 기술국가주의와 셀프 오리엔탈리즘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즉 상업주의와 국가주의의 그림자 속에서 상업적 소비문화로 전락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이와부치 고이치, 2001).¹²

한류의 추세 속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낳고 있는 부작용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정부는 한류 열풍을 국가적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재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한류를 국가적 브랜드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류의 세계화’는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속에서 ‘문화강국’ 한국의 지위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조한혜정, 2003; 이동윤·안민아, 2007: 114-115). 이러한 문화정책은 자국의 문화상품을 보급하고 선전하겠다는 철저한 국민국가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정책적 관심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문화 본연의 기능보다는 여전히 경제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김문환, 2006: 43-44).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하려는 문화정책의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대중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양과 질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문화정책이 갖는 의미도 크다(심상민, 2004: 136-143).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경제발전의 과제를 여전히 추구하려는 근대국가의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구조가 낳게 될 부작용은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공동의 문화적 틀’ 또는 ‘정체성’의 확보작업이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에 휩싸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김광역, 2005: 348; 김기봉, 2006: 203). 문화산업의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는 부득이하게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패러다임

12. 이와부치 고이치(岩 濑 功 一)는 일본문화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무취성(無 臭 性)을 꼽고 있다. 문화의 고유한 색채를 없애는 혼성화 전략을 추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일본판으로 개조한 ‘국가주의적 신(新)아시아주의’가 깔려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기술을 강조하는 일본인들을 왜곡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서구의 편향성까지 가세함으로써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이다(이와부치 고이치, 2001).

속에서 문화의 왜곡과 사이버문화의 증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에 압도되어 있는 동아시아 문화의 복구작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

IV. 의미권과 정체성: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1. 트라디툼과 정체성

14세기 이슬람의 역사학자였던 이븐 할둔(Ibn Khaldûn)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시대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데 역사의 큰 함정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함정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밝혀지기 때문에 쉽사리 알기 어렵다. 여기에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망각과 부주의까지 더해져 과거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항상 오류를 범하곤 한다. 특히 현재의 시각과 지식으로 과거를 재단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Khaldûn, 2003: 49-50).¹³ 이러한 할둔의 충고는 오늘날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에서 드러나는 오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술과 대중사회의 발전에 따라 문화의 속성이 변하게 되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특권층을 통해 유지되어온 전통문화가 엘리트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현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기준에 따라 대중문화의 제 요소들을 서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통문화는 과연 엘리트 중심적이기만 한 것인가?

전통에 대한 생각은 진보(progress)의 관념이 발전하면서 크게 바뀌어 왔다.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버리거나 고

13. 이븐 할둔은 기본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연구에 매달리는 현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중에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Khaldûn, 2003: 51-53).

쳐서 새로운 것,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변화는 곧 진보로 인식되었고, 과학과 혁신은 바람직한 진보의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지식은 진보의 장애물로 간주되어왔다. 또한 전통은 과학적 진보의 광풍 속에서 철저히 무시되기도 했다(Shils, 1981: 2-5).¹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대중적 상업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상실되어가는 전통문화의 더욱 핵심적인 측면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의미부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역시 이러한 의미를 창출하는 전통적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20세기 국가주의의 가치 아래 초국가적 문화교류와 의미 창출의 기회는 거의 좌절되어 왔던 것이다.

전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뜻이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통을 이야기할 때에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이 또는 전달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실즈(Edward Shils)는 이처럼 전달되는 대상을 ‘트라디툼(traditum)’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트라디툼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동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트라디툼은 전달되는 행동의 패턴(patterns) 또는 이미지(images)이며, 과거의 속성이 묻어나는 전통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겪게 되며,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반복한다(Shils, 1981: 12-14). 이러한 과정을 함께 겪는 사람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과 세대를 거치면서 공동의 의미를 나누게 된다. 이렇게 공유된 의미는 사람들을 한데 묶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 또는 문화적 산물이다. 오늘날의 문화담론이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에만 치우쳐 있는 동안 이러한 의미공유의 측면은 철저히 무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문화를 논의할 때 왜 과거의 전통에 매달리는 것일까? 트라디툼은 오늘날의 문화질서에서 어떤 존재가치를 지니는 것일까? 이것은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affirmation)과 동의(acceptance)를 가능케 해줌으

14. 전통은 도그마 또는 미신처럼 치부되었으며, 구체제(*ancien régime*)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것이 실즈(Shils)의 견해이다. 그가 보기에 ‘빛(*les lumières*)’을 추구하는 진보적 입장에서는 ‘그늘(*les ombres*)’에 안주하는 구체제야말로 철저히 무시하거나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Shils, 1981: 5-6).

로써 규범적(normative) 질서를 만들어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전통이 규범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전통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거나 정확한 묘사를 지향한다. 이런 속성은 과학이나 계몽에서도 나타나는데, 전통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과거와 전통은 세대를 거치면서 현재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Shils, 1981: 23-24). 오늘날 동아시아 질서와 그 속에서 문화변수가 차지하는 의미를 논하는데 있어 이러한 영향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모든 상위정치적 교류와 경제적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규범적 트라디툼 만큼 강력한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문화와 관련된 개인들의 정체성이란 퀴트 보자기처럼 자신들이 선별하여 짜입기한 것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문화적 뿌리를 찾는 일이란 끊임없이 이러한 퀴트를 뜯어고치고 새롭게 기워나가야 할 평생의 과제로 남아 있다. 사람들은 여러 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다문화적 인격’을 보유했다. 그러한 문화권의 경계선 위에 걸터앉은 한다(Breidenbach and Zukrigel, 2003: 86). 흥미로운 점은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보드리야르도 지적했듯이, 유럽인들이 유럽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¹⁵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유럽’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이념, 꿈, 또는 유토피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견고한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담론 속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아이디어(idée force)’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보드리야르는 동유럽 사람들이 서유럽 사람들에 비해 유럽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서유럽 사람들이 ‘진정한 유럽’ 속에 살면서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하지만, 동유럽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체성은 개인의 존립에 중요한 요소이면서

15. 보드리야르는 유럽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회의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문화를 안다는 것’이 감각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가 보기에 이 회의에 모인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와 같은 비(非)유럽인들이 오히려 유럽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Baudrillard and Sassatelli, 2002: 522).

동시에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남아 있다.

정체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화교류와 통합의 노력도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럽연합의 경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 연합이라는 형식적 제도는 유럽의 통합을 단지 가상적 차원에서만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로화라는 경제통합의 상징조차도 하나의 인공물에 불과하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유럽의 공통화폐단위일 뿐 ‘유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유럽인(Europeans)’이라는 것도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초현실 공간(hyperspace) 속에서 창조될 따름이다. 보드리야르가 보기에 ‘진정한 문화’란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기껏해야 멀티미디어라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초현실 문화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문화상품’일 따름이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상품의 교류는 결코 순수한 문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Baudrillard and Sassatelli, 2002: 523-525).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지금까지는 ‘권력’과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어왔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문화의 개념이 워낙 포괄적인 까닭에 단일한 규정을 찾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정체성(identity)’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¹⁶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문화적 ‘의미권’에 대한 논의가 출발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사람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의미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정체성의 망(網)은 하나의 의미권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교류의 장(場)이 된다. 진정한 문화공동체의 구축은 바로 이러한 의미권의 형성으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가 국제질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판단도 이러한 의미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Bially Mattern, 2004: 27-44).

16. 여러 국제관계이론 중에서도 구성주의 이론이 문화적 정체성의 변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구성주의 이론은 정체성이 국제질서의 원천이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는데, 특히 불안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Wendt, 1999: 313-336; Bially Mattern, 2004).

카스텔(Manuel Castells)에 따르면 ‘정체성’이란 의미와 경험의 원천을 일컫는다. 문화적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의미권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정체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의미(meaning)’란 사회적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목적에 동화하는 상징적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카스텔은 정체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배기구의 정당성 제공을 위한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 지배질서를 거부하는 ‘저항 정체성(resistance identity),’ 그리고 기존의 지위를 재규정하고 전체 사회구조를 변환시키려는 ‘프로젝트 정체성(project identity)’이 바로 그것이다(Castells, 1997: 6-8). 다양한 정체성의 유형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프로젝트 정체성’이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달리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기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체성 관념들은 그것이 수행해온 기능, 즉 정당화와 저항의 수단이라는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험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한데 묶는 고리의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을 넘어 한층 더 발달된 형태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모형을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상정할 수 있다.

좌파 이론가로서 카스텔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는 부(富)와 권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소외된 집단들의 ‘문화공동체(cultural communes)’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동체는 종교, 민족, 또는 영토를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사회 속에서 새로운 의미권을 형성한다. 새로운 의미권 내부에서는 적대적인 외부 세계에 반발하여 내부적으로 단합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의미권은 방어적이면서 저항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적 정체성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따라서 카스텔은 이러한 방어적 문화공동체의 ‘저항 정체성’을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간 ‘프로젝트 공동체’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astells, 1997: 65-67).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온 저항과 정당화의 기능

을 넘어서 새로운 통합적 정체성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는 새로운 ‘의미권’에 대한 탐색과 구상으로 이어진다.

2. 의미권의 구축과 문화네트워크

문화의 의미권 기능에 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문화산업론을 지탱하고 있는 미디어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오늘날 비대칭적 문화흐름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제국주의’ 개념 역시 미디어 제국주의의 수준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 오늘날 미디어의 영향이 강력해지기는 했지만 이것을 단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지탱하기 위한 유일한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만 다루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포괄적인 문화의 모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문화의 변환에 대해 고찰해야만 한다. 미디어를 문화담론의 중앙에 배치하고 그것이 마치 문화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Tomlinson, 1991: 53-58). 그렇다면 문화담론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의미권’의 개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다. 문화의 모든 요소들은 이제 지역적 차원을 넘어 본질적으로 탈(脫)장소적 이동성을 띠고 있다(Tomlinson, 2004: 50).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과 의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문화의 특징은 그것이 혼합적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혼합적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합쳐짐으로써 완전하게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문화들을 물리적으로 병치한다는 관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문화의 개별적인 속성만을 강조하는 성향을 흔히 ‘문화 모자이크 관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생각은 일찍이 보들리야르가 비판했듯이 자본주의적 문화 비즈니스 사고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개별 문화가 지닌 고유한 속성들을 짜깁기

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화의 차별성만을 강조하는 문화 모자이크 개념은 다양한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결코 적절하지 않다. 어떤 개별문화도 결국에는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갖춘 정체적 단위로 존재해오지 않았다(Breidenbach and Zukrigel, 2003: 24). 그만큼 문화는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된다.

문화적 타자(他者)들이 순수하고 동종적이며 완결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서구인들이 파편화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해낸 허구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의 명령처럼 억지로 부과된 이미지인 것이다. 이처럼 '차이'에만 중점을 둔 문화개념은 그것을 절대화하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타자를 타자가 되게끔 하는 도구'라고 불려왔다. 문화시스템에서도 동종화와 차별화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과정이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지구촌의 문화는 한편으로 점점 유사해지고 다른 편으로 점점 다양해진다(Barber, 2003; Friedman, 2003).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글로벌 문화 담론은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관례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 얽매어왔다. 예를 들어 글로벌 지역, 토착-수입, 진정성-혼합성 등의 이분법은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관행적인 구분기준이 되어 왔다. 문화적 정체성과 의미권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혼성적, 복합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체성은 유사성과 차이, 결합과 구분, 집단과 개체의 관계로부터 생성된다.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세계화 시대의 정체성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보편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사회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국가가 더 이상 이러한 정체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Barney, 2004: 143-146).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이 가능한 것일까? 적어도 이것이 하나의 '기획'으로서 추진되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과 같이 앞서가는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Sassatelli, 2002; Mayer and Palmowski, 2004).¹⁷ 결국 동아시아의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가능케 하는 일이 바로 문화적 의미권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Gilson, 2007).¹⁸ 동아시아 내에서 제기되어 온 수많은 정체성 프로젝트들이 지금까지 선언에만 그친 채 실천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Jones and Smith, 2007).

카스텔이 제안했던 ‘프로젝트 정체성’의 당위성은 이러한 논지에서 출발한다. 동아시아 문화 정체성의 구축도 이러한 근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기획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문화적 패러다임이 항상 의도했던 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보드리야르의 충고는 새겨들을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가 곧 미국문화의 연장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그가 보기에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세계화의 피해자일 따름이다. 세계화와 같은 거대한 물결은 어느 한 나라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거나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전략’ 따위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Baudrillard and Sassatelli, 2002: 523). 우리가 문화적 정체성과 의미권을 구축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래 의도했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상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둘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은 강요된 통합의 위험성을 극복해야만 한다. 인류학자인 하네르츠(Ulf

17. 유럽연합의 정체성 역시 복수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유럽의 문화적 기반은 동아시아 지역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복합적 정체성을 만들고자 한 노력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Mayer and Palmowski, 2004: 579-581).

18. 길슨(Julie Gilson)은 전략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집단정체성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길슨의 논지는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동지도력(joint leadership)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집단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 즉 문화적 시각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Hannerz)는 오늘날 하나의 ‘세계문화(world culture)’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것이 의미와 표현체계의 전면적인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더불어 강조하였다. 이 개념은 단지 세계가 하나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들 사이에 사람, 재화, 의미의 흐름이 존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세계문화라는 것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현실과 경험의 통합현상, 즉 ‘문화네트워크’라고 이해할 수 있다(Tomlinson, 2004: 105-106).¹⁹ 문화네트워크는 문화적 정체성과 의미권의 구축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위한 틀 역시 문화네트워크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라는 통제형, 하향식, 중앙집중형 구도를 넘어 자발적이면서 분산형 구도를 띤 네트워크 연결망이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정체성의 발견과 의미권의 구축은 그만큼 복잡하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이 이루어진다(Katzenstein, 2000: 354).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구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논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하기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벤하비브(Seyla Benhabib)가 제시한 ‘문화공론장(public sphere)’의 관념은 새겨들을만한 가치가 있다. 그에 따르면 헌팅턴이 제기한 문화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보편주의(cultural universalism)와 다문화주의(culticulturalism)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공동의 장소’가 필요하다. 공동의 장소가 반드시 물리적 공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의 핵심 요소는 ‘자기(we)’와 ‘타자(others)’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대화, 만남, 인적 교류 등이 일어나는 공공영역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Benhabib, 2002: 8).²⁰ 정보화에 한걸음 앞서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점에서 유

19. 하네르츠는 통합되고 동질화된 세계문화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 가능성조차 부정할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세계화된 문화(globalized culture)’로부터 ‘세계문화(global culture)’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Tomlinson, 2004: 106-107).

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의 문화공론장이 공동의 정체성과 의미권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동아시아 의미권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의 노력으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다. 이 두 단체들은 비록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단순한 논리를 넘어 보다 개방적인 문화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1991년에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한국연구 지원, 인적교류와 자료지원, 펠로우십 제도 등을 통해 한국과 외국의 문화적 교류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1972년에 설립된 독자적인 행정조직으로서, 문화예술의 교류뿐만 아니라 해외의 일본어 및 일본학 연구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두 단체 모두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사업이 타국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국을 홍보하려는 노력에 더 치중해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대비하여 2001년에 시작된 『미래를 여는 역사』(2005) 프로젝트는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공동작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편협한 민족주의적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한중일 3국의 학자들 사이에 자국 중심의 역사기술을 뛰어넘으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이나 중국 못지않게 한국의 역사기술도 오랫동안 민족과 국가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작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동아시아 문화공론장을 위한 초기 작업으로서 이러한 ‘탈(脫)국사’의 움직임은 장차 ‘기억의 장(場)’으로서의 동아시아를 기대하게 해준다(김기봉, 2006: 182-183). 비록 이러한 작업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작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²¹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획된 프로젝트’로서 공동의

20. 이러한 입장은 롤즈(John Rawls)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벤하비브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모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입장에 더 기울어져 있다(Benhavib, 2002: 104).

역사교과서와 같은 동아시아 공론장의 시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많은 단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이다.

V. 맺음말

동아시아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와 본질적인 속성에 있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9세기 이후의 역사적 궤적은 동아시아 문화의 특수한 성격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식민역사와 전쟁, 그리고 이후의 근대화 노력과 국민국가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강한 유산으로 잔존하면서 독특한 복합적 속성을 발산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문화변수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도 결국 냉전이 종식된 이후이며, 그나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 한참 더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확산과 그 안에 담겨 전파되는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과 지식체계의 발전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문화변수의 비중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담론이 지나치게 다른 영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가 오늘날 동아시아 질서의 문화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산업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성과 상품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 본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문화산업의 동반자 역할을 맡

21. 이러한 공동의 역사교과서 작업이 지닌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3국의 학자들이 모여 각자의 입장을 기술하고 이를 한데 합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45년 8월 15일에 대한 기술은 3개 국가의 관점을 나란히 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김기봉, 2006: 189-190).

고 있는 문화정책의 논리 역시 중앙집중적 메커니즘을 동원하여 하향식 통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의 논리는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과 배치된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부분적으로 대중사회 시대의 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다자간 문화 패러다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국중심주의적 문화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었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본 논문에서는 공동의 정체성 확립과 의미권의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트라디툼’의 논리는 문화적 정체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통적 요소를 대변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권’의 구축이 미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질서의 문화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권의 구축은 한 나라의 지배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거의 없지만,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공동의 문화기획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론장’을 마련하는 일 역시 앞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방향을 가늠 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비록 본 논문에서는 시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문화국가로 향한 백범의 꿈은 아마도 이러한 과제를 달성한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내희. 1998. 「‘문화공학’을 제안하며.」 『문화과학』 14. pp. 13-45.
 고병익. 1996. 『동아시아사의 전통과 변용』. 서울: 문학과 지성사.
 구문모, 임상오, 김재준. 2000.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서울: 을유문화사.
 김광역. 2005.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의 필요성과 가능성」. 최영종 외.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pp. 329-367.
 김구. 2002. 『백범일지』. 서울: 소담출판사.

- 김국신·송정호·이교덕·정정숙. 2006.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II): 종합편』.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서울: 푸른 역사.
- 김명섭·이동윤. 2005.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21권 2호. pp. 1-30.
- 김문환. 2006. 「한류의 문화정책: 문화 외교적 관점에서」. 『철학과 현실』 69호. pp. 41-53.
- 김상배. 2006. 「실리우드(Siliwood)의 세계정치: 정보화시대 문화제국과 그 국가전략적 함의」. 『국가전략』 12권 2호. pp. 5-34.
- 김상배. 2007.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28집 1호. pp. 193-233.
- 김재범. 2005. 『문화산업의 이해』. 서울: 서울경제경영.
- 김정수. 2006.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파주: 집문당.
- 박홍규. 1995. 「제국주의 문화논리에 매몰된 우리」. 『역사비평』 32호. pp. 199-213.
- 심상민. 2004. 「창작과 놀이가 곧 생업이 되는 미래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의 전망」. 『계간사상』 봄호. pp. 127-149.
- 양건열·임학순·최건. 2006.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동연. 2006. 『아시아 문화연구를 상상하기: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본의 논리를 넘어서』. 서울: 그린비.
- 이동윤·안민아. 2007. 「동아시아에서 한류의 확산과 문제점: 문화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5집 1호. pp. 99-125.
- 이와부치 고이치(岩瀨功一). 2001. 『トランスナショナル・ジャパン』. 히라타 유키에(平田由紀江). 전오경 옮김.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전영평·박경하. 2004. 「동북아 상호이익과 갈등극복을 위한 방안」. 최송화·권영설 편저. 2004.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 조한혜정. 2003. 『한류와 아시아의 대중문화』.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 서울: 한겨레출판.
- Açikel, Fethi. 2006. "A Critique of Occidental Geist: Embedded Historical Culturalism in the Works of Hegel, Weber and Huntington." *Journal of Historical Sociology*, 19(1). pp. 60-83.
- Adorno, Theodor W. 1975. "Culture Industry Reconsidered." *New German Critique* 6. pp. 12-19.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endt, Hannah. 2005[1954]. *Between Past and Future: Eight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서유경 옮김. 『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학연습』. 서울: 푸른숲.
- Barber, Benjamin R. 2003. Jihad vs. McWorld. 박의경·이진우 옮김. 『자하드 대 맥월드』. 서울: 문화디자인.

- Barney, Darin. 2004.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Polity.
- Baudrillard, Jean and Monica Sassatelli. 2002. "An Interview with Jean Baudrillard: Europe, Globalization and the Destiny of Cul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4). pp. 521-530.
- Beeson, Mark. 2005. "Rethinking Regionalism: Europe and East Asia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2(6), pp. 969-985.
- Benhabib, Seyla. 2002. *The Claims of Culture: Equality and Diversity in the Global Er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ially Mattern, Janice. 2004. *Ordering International Politics: Identity, Crisis, and Representational Force*. New York: Routledge.
- Breidenbach, Joana and Ina Zukrigel. 1998[2003]. *Tanz der Kulturen*. 인성기 옮김. 『춤추는 문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다원화』. 서울: 영림카디널.
- Burckhardt, Jacob. 1943[2006]. "Excerpt from the Three Powers." In Robert M. Burns, ed. *Historiography: Critical Concepts in Historic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20-146.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I.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1997. *The Power of Identi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II.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In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3-45.
- Cioffi-Revilla, Claudio. 1998. *Politics and Uncertai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x, Robert W. 1984.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 B. J. Walker, ed. *Culture, Ideology, and World Order*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pp. 258-299.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8(1). pp. 1-40.
- Damton, Robert. 1984[1996]. *The Great Cat Massacre*.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 프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 Deyo, Frederic C. ed.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odson, Donald. 1998[1978]. "Differentiating Popular Culture and Mass Culture." 강현두 역음.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서울: 나남출판.
- Friedman, Thomas L. 2003.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신동욱 옮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서울: 창해.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 Press.
- Gans, Herbert J. 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te*. New York: Basic Books.
- Giddens, Anthony. 1991[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이윤희·이현희 옮김. 『포스트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 Gilson, Julie. 2007. "Strategic Regionalism in East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3. pp. 143-163.
- Giovannetti, Emanuele, Mitsuhiro Kagami and Masatsugu Tsuji, eds. *The Internet Revolution: A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court, Wendy. 2003. "The Global Network Society: New Freedoms or Old Limitations?" *Development* 46(1). pp. 5-8.
- Harvey, David. 1994[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구동회·박영민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한울.
- Holzer, Boris. 2000. "Miracles with a System: The Economic Rise of East Asia and the Role of Sociocultural Patterns." *International Sociology* 15(3). pp. 455-478.
- Horkheimer, Max and Theodor W. Adorno. 1995[1947].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김유동·주경식·이상훈 옮김. 『계몽의 변증법』. 서울: 문예출판사.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 Jameson, Fredric. 1998. *The Cultural Turn: Selected Writings on the Postmodern, 1983-1998*. London and New York: Verso.
- Jamieson, Dale. 1996. "Scientific Uncertainty and the Political Process." *Annals, AAPSS* 545. pp. 35-43.
- Jervis, Robert. 1997.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David Martin and Michael L. R. Smith. 2007. "Constructing Communities: The Curious Case of East Asian Region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3. pp. 165-186.
- Katzenstein, Peter J. 2000. "Regionalism in Asia." *New Political Economy* 5(3). pp. 353-368.
- Katzenstein, Peter J. 1996.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operation and Conflict* 31(2). pp. 123-159.
- Keane, Michael. 2006. "Once Were Peripheral: Creating Media Capacity in East Asia." *Media, Culture & Society* 28(6). pp. 835-855.
- Khaldūn, Ibn. 2003[1967]. *The Muqaddimah: An Introduction to History*. Translated by F. Rosenthal (Abridged ed. by N.J. Dawood). 김호동 옮김. 『역사서설: 아랍, 이슬람, 문명』. 서울: 까치.
- Kurlantzick, Joshua. 2007. "Pax Asia-Pacific? East Asian Integration and Its

-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Quarterly* 30(3). pp. 67-77.
- Lim, Jamus Jerome. 2002. “East Asia in the Information Econom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fo* 4(5). pp. 56-63.
- Mayer, Franz C. and Jan Palmowski. 2004. “European Identities and the EU: The Ties That Bind the Peoples of Europ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2(3). pp. 573-598.
- North, Douglass. 1981.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Norton.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홍수원 옮김,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 Pempel, T. J.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Pyle, Kenneth B. 2003. “Regionalism in Asia: Past and Future.”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16(1). pp. 17-32.
- Rathbun, Brian C. 2007. “Uncertain about Uncertainty: Understanding the Multiple Meanings of a Crucial Concept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1. pp. 533-557.
- Said, Edward.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김성곤, 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도서출판 창.
- Sassatelli, Monica. 2002. “Imagined Europe: The Shaping of a European Cultural Identity through EU Cultural Polic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4). pp. 435-451.
- Shils, Edward. 1981. *Tra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mes, Dimitri. 2005. “Jihad, Unintended.”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pp. 5-8.
- Tempelman, Sasja. 1999. “Constructions of Cultural Identity: Multiculturalism and Exclusion.” *Political Studies* 47. pp. 17-31.
- Tomlinson, John. 1991. *Cultural Imperi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강대인 옮김. 『문화 제국주의』. 서울: 나남출판.
- Tomlinson, John. 2004 [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김승현, 정명희 옮김. 『세계화와 문화』. 서울: 나남출판.
- Vernon, Richard. 1979. “Unintended Consequences.” *Political Theory* 7(1). pp. 57-73.
-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ttel, Andreas. 2001. “Toward a Network Sociality.” *Theory, Culture & Society* 18(6). pp. 51-76.

Cultural Networks in East Asia: Beyond the Paradigm of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y

Byoung Won M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fanatic boom of the *han-ryu* or the *Korean wave* during the last decade has stimulated people's attention to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This paper argues that the logic of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y has overwhelmed the cultural paradigm in East Asia. The logic of cultural industry is based upon the neoliberal ideology so as to encourage capitalist competitiveness in terms of efficiency and commerciality. This means that we may miss the essential, endogenous values of culture. The logic of cultural policy also hampers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ssets as it accompanies hierarchical, top-down control mechanisms. This logic of hierarchical control contradicts the core aspect of culture — creativity. Although the logic of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y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and diffusion in the era of mass society, the paper argues for going beyond the current paradigms of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y in order to realize a multilateral cultural paradigm in East Asia.

This paper,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paradigms of cultural industry and cultural policy, suggests that we need to establish a common identity and a zone of meanings in the region. The concept of *traditum* introduced here represents the traditional element of legitimizing a common identity. In this sense, the paper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a zone of meanings in the East Asian region. This will be the cultural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East Asian order, but it should be in the form of social construction rather than domination by a country. Thus, the paper emphasizes the logic of cultural networks in the region in order to overcome the ethnocentric and nationalistic biases in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public sphere is also important in setting up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ast Asian order.

Key Words: East Asia, cultural networks, cultural industry, cultural policy, *traditum*, identity, zone of meanings, cultural public sphere

